

〈특집 2: 근현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 석탄 연구사의 현황과 과제*

김 경 옥 **

〈목차〉

I. 들어가기

II. 일본의 연구 현황

1. 식산흥업과 부국강병 중심의 근세 말과 메이지 초기의 광산(광업) 연구사
2.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석탄 연구사
3. 전후복구와 경제부흥 중심의 점령기와 고도성장기 석탄 연구사
4.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광산(탄광) 연구사

III. 나오며-연구 과제

1. 석탄 연구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
2. 폐광(폐산)과 기억

[국문초록]

석탄업은 현대 일본의 경제적 발전의 토대가 된 산업으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석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석탄 연구사도 국가와 산업의 관계, 특히 국가의 관리와 통제 등, 국가의 개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이 논문은 〈2021년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춘계학술대회〉(2021.03.12)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가필한 것임을 밝힌다.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향 및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 노동, 복지, 지역사와 같은 제반 연구영역과 폭넓은 관계를 보이며 연구사적 의미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본 석탄 연구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석탄'이라는 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에 따른 사건별로 구분하여 시대적 특징 및 국가의 개입을 중심으로 연구사의 현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세 말과 메이지 초기의 광산(광업)사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 점령기와 고도경제성장기, 그 외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광산 연구사로 구분하여 연구사의 현황을 검토한다. 석탄 연구사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석탄업의 진입과 발전, 퇴출 등 모든 과정에 국가의 개입과 석탄업 간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석탄 연구사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여성노동자와 이미 폐광(폐산)되어 흔적조차 없어진 조선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기억의 방법적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것을 연구과제로서 제의하는 바이다.

□ 주제어

석탄사, 근현대 일본, 아시아태평양전쟁, 국가의 개입, 점령기

I. 들어가기

약 150년 전, 일본이 가진 유일한 에너지 자원은 석탄이었다. 당시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메이지 정부는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탄업을 모든 산업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중심축으로 정하고 '식산흥업'과 '부국강병' 노선을 따라 석탄업의 진흥을 도모하였다. 1931년 시작되는 만주사변과 연이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의 진주만공격 등 15년간의 전

쟁 중, 석탄은 일본정부의 통제경제 아래에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리하에 있었다. 전후, GHQ의 간접점령기에도 석탄은 국가의 전략적 정책 지원하에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해 경사생산 방식을 취하며 일본정부의 관리와 통제하에 두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석탄업은 현대 일본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산업으로 석탄의 중요성은 근현대 일본사에서 특히 주목된다. 마찬가지로, 석탄사 연구도 국가와 산업의 관계, 특히 국가의 관리와 통제 등, 국가의 개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적 기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근대의 석탄업은 인적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라는 특징상,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 및 노동, 복지, 지역사와 같은 제반 연구영역과 폭넓은 관계를 보이며 연구사적 의미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일본에서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이나 수력, 풍력, 태양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받으며 석탄업은 사양산업으로서 거의 퇴출되었다. 석탄업의 퇴출은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게 된 1950년대 후반에 이미 예상되었다. 1957년 일본의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일본 국내 석탄의 비중은 약 43%였지만, 1963년에는 약 23%로 20%나 감소하고 있다. 1955~1960년대 후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 생산성이 좋은 석유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수입되어 석탄을 대체하게 되면서 석탄이 충당하던 에너지 수요를 석유가 충당하게 된 것이다.¹⁾

본고는 일본 석탄 연구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석탄은 일본 산업사에서도 중요한 부문이지만 현재 석탄에 주목하는 연구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석탄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으로 자원으로

1) 정진성, 「에너지혁명기 일본 석탄산업의 노동운동-석탄정책 전환투쟁을 중심으로」, 『韓日經常論集』 제56권, 2012, 53-54쪽.

서, 산업으로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 국가 성립부터 제국 일본으로의 발전과 팽창, 전시기, 그리고 전후 복구 등이 모든 과정에서 '석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석탄업은 근대 산업발전의 선두주자로서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에는 1,072만톤, 1920년대 중반부터는 채탄과 운반 현장에서 기계화가 진행되어 출탄 능력도 현저하게 향상되어 출탄량은 3,000~4,000만톤으로 증가하고, 1937년 증일전쟁 이후에는 증산에 증산을 거듭하여 1940년에는 5,631만톤의 출탄 실적을 올렸다. 이 기록은 일본 석탄사상 최고의 출탄 기록이 되었다.²⁾ 일본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1938년 5월에 실시된 국가총동원법 하에서, 1940년 10월 석탄증산대책요강을 결정하고 1941년 3월 중요산업단체령에 근거한 석탄통제회를 설립하였다. 1941년부터 전시비상석탄증산기간을 설정하고 석탄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쟁 말기까지 석탄 증산을 강조한 석탄통제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본고는 '석탄'이라는 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에 따른 사건별로 구분하여 시대적 특징 및 국가의 개입을 중심으로 연구사의 현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세 말과 메이지 초기의 광산사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석탄 연구, 점령기와 고도경제성장기 석탄 연구, 그 외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광산(탄광) 연구로 구분하여 연구사의 현황을 검토한다. 석탄 연구사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석탄업(광업)의 진입과 발전, 퇴출 등 모든 과정에 국가의 개입과 석탄업(광업) 간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석탄 연구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여성 노동자와 이미 폐광(폐산)되어 흔적조차 없어진 조선인 노동자들을 어떻

2)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https://www.enecho.meti.go.jp/about/whitepaper/2018html/1-1-2.html>), 검색일: 2021년 3월 26일.

게 기억할 수 있을지 기억의 방법적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것을 연구과제로서 제의하는 바이다.

II. 일본의 연구 현황

1. 식산흥업과 부국강병 중심의 근세 말과 메이지 초기의 광산(광업) 연구사

일본에서 1980년 이전에 행해진 연구의 특징은 광산사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이 아닌 금, 은, 동 그 외 금속광산에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일본의 근세 말기에 해당하는 막부 말기와 근대 국가를 지향한 메이지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근세 말, 메이지 초기의 광산개발은 근대공업화를 위한 기계, 기구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과, 철도와 기선 운행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광산개발은 관련 기계산업과 운수 등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일본 근대화 건설에 공헌하였다. 근세 광산사 관련 대표적 연구는 고바타 아쓰시(小葉田淳)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고바타는 『광산의 역사(鉱山の歴史)』, 『일본광산사 연구(日本鉱山史の研究)』, 『화폐와 광산(貨幣と鉱山)』 등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의 식산흥업정책 속에서 메이지 정부가 ‘일본갱법(日本坑法, 1873년 9월 1일 시행)과 ‘광업조례(鉱業條例, 1892년 6월-1905년 6월까지 시행됨)’³⁾ 등을 시행하며 관의 보호 속에서 민의 자

3) 일본갱법은 일본 최초의 광업법으로 광물은 모두 정부의 소유이며 정부만이 채굴할 권리가 있음을 광물에 대한 국가독점주의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업조례는 종래의 광물에 대한 국가독점주의를 광업자유주의로 개정하여 일정 조

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광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지원한 것을 고찰하였다.⁴⁾

이와 관련하여 가와사키 시게루(川崎茂)는 막말에 번주가 경영하던 주요 광산들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나 메이지 산업혁명기의 광산기술과 광산경영의 근대화로 주요 금속광산이 회복된 것을 설명하며 이것을 ‘광산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⁵⁾ 메이지 정부는 관영방침의 ‘식산흥업’ 정책 하에서 메이지 초기부터 구미의 광산기사를 초빙하고 서구의 근대화된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광산업의 근대화를 꾀했다. 1880년대, 메이지 정부는 당시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1835-1924)의 긴축 재정 하에서 산업정책을 민영방침으로 이행하고, 1884년 이후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후루카와(古河) 등 이른바, 정상(政商)재벌에게 광산을 불하하여 관민 중심의 광산업을 이끌었다.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 1차대전(1914-1917)을 거치며 산업규모가 확대되었지만, 1차대전 후의 불황으로 많은 광산이 휴산(休山)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함으로써 고도의 광산산업혁명을 진행하였다. 가와사키는, 근세 초 막번체제의 기간산업이었던 금속광산이 번성기에는 수만 명의 인구가 종사하였을 만큼 번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후 메이지 초년까지 쇠퇴기를 거쳐 근대 이후, 광산산업혁명을 통해 고사카(小坂), 히타치(日立), 하나오카(花岡) 등의 주요 광산지역이 대광산지역으로 변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⁶⁾

긴 하에서 평등하게 개인에 대한 광업의 경영을 허가하고 있다.

4) 근세 광산사 관련 대표적 연구는 고바타 아쓰시(小葉田淳)의 연구를 들 수 있다. 小葉田淳, 『鉦山の歴史』, 至文堂, 1956; 『日本鉦山史の研究』, 岩波書店, 1968; 『貨幣と鉦山』, 思文閣出版, 1999. 그 외 荻愼一郎, 「近世日本の鉦山—薩摩藩領長野(山ヶ野)金山の開発と寛永20年の閉山を中心に」, 『まてりあ』 45(4), 2006 등이 있다.

5) 川崎茂, 「鉦山業近代化の空間的構造展開」, 『地理學評論』 31(12), 1958.

메이지 정부는 1892년 ‘광업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업자유주의’를 내세워 광물 채굴권을 개인에게 허가하고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기계를 도입하여 광산의 대규모화를 촉진하였다. 아사다 다키(淺田毅衛)는 「메이지기 식산흥업정책의 종국과 일본자본주의의 확립(明治期殖産興業政策の終局と日本資本主義の確立)」에서 광산노동의 위험성과 관업 불하 후 광산기업이 석탄광산과 금속광산에서 어떤 식으로 노무관리를 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당시 석탄광산은 나야제도를, 금속광산은 함바제도를 통해 광부의 노무를 관리하였고, 광산기업은 나야와 함바의 우두머리를 고용함으로써 광산의 노무관리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나야와 함바의 우두머리가 광부의 모집부터 생활 관리, 채굴과 개갱(開坑) 등의 작업 청부, 임금까지 일

6) 이와 관련된 연구로 강소홍(秦小紅)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소홍은 일본이 패전 후 경제적 파국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메이지 정부의 식산흥업정책의 전개로 근대산업의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후 부흥에 지극히 중요한 인적자본과 제도가 축적되어 온 것을 다루고 있다. 관영주의적 식산흥업정책은 구막번영(旧幕藩營)광산의 접수에서 시작되었고, 관영광산에 의해 일본의 광업의 근대화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공부성(工部省)은 1870년에 설립되어, 광산, 제철, 철도, 전신 등 폭넓은 범위에서 식산흥업을 하였다. 식산흥업정책의 대부분은 당초 외국자본을 배제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광산에서는 메이지 정부의 독점체제가 일찍부터 확립한 것도 화폐제도면에서의 외압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관영 불하처는 주로 정부와 인맥이 있는 특권적 정상(政商)이고 게다가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불하하였다. 정부는 불하정책을 통해서 상인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조장하면서 동시에 공부성을 대신한 농상무성을 설치하고 민간산업의 육성, 보호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광산의 개발도 철도 항만의 정비, 청일전쟁 후의 근대경제의 본격적인 발흥에 따른 수요 증대, 그리고 수요증대에 동반된 거액의 자본 축적에 근거한 근대설비의 도입 등을 계기로 급격한 발전을 거뒀다. 광산개발의 급속한 발전은 근대공업화의 발전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과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여러 근대적 기계기구의 수요는 국내의 관련사업의 발달을 자극하고, 일국의 경제의 자립성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 기계공업에 기여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秦小紅, 『日本の近代工業化の發展過程-殖産興業政策・財政・勞働力の視點から』, 『商學研究論集』 38, 明治大學商學部, 2013.

괄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이것은 광부의 증노동과 저임금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광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이케(三池)탄광에서 실시한 '수인(囚人) 노동'은 수인 광부의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탄광경영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광산 노무관리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⁷⁾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田豊)는 후쿠오카현(福岡縣)의 지쿠호(筑豊)탄광 여성노동자의 고용과 해고 과정을 석탄광업기술의 발전 변용과 관련해서 고찰하였다. 지쿠호탄광은 인원수에서 남성노동자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던 여성노동자를 광산합리화에 따라 해고하였다. 지쿠호탄광이 노동쟁의와 같은 갈등 없이 여성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조달한 생활비가 새로이 장려된 내직(부업)과 복리시설로 어느 정도 대체되어 광산노동자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이었다.⁸⁾

이 시기 광산기업은 광독과 광해의 폐해를 담보로 재산축적을 하고 있었다. 에도시대부터 문제가 된 스미토모 벳시(別子)광산의 광독수 문제, 후루카와 아시오(足尾)광산의 광독사건 등 광해로 인한 폐해는 광산업 발전의 부(負)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업 불하를 받은 광산기업 즉, 정상(政商)재벌인 미쓰이·미쓰비시·스미토모·후루카와에게 있어 광산업은 막대한 이익의 원천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근세 말기와 근대 국가 성립기 메이지 정부하에서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석탄(광산)업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과 재벌의 적극적 자본투자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淺田毅衛, 「明治期殖産興業政策の終局と日本資本主義の確立」, 『明大商學論叢』 79(1-2), 明大大學商學部, 1997.

8) 西成田豊, 『近代日本勞働史-勞働力編成の論理と實証』, 有斐閣, 2007.

2.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석탄 연구사

(1) 조선인 강제동원과 석탄 연구사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석탄 연구는 인적 노동을 기반으로 한 석탄업이라는 특징처럼 이 시기 탄광이나 광산의 노무문제, 특히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민족차별,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전시기의 석탄업에서 노동력 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동시에 석탄업의 최대의 약점이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모든 탄광지역의 공통점이었다. 석탄업의 노무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며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중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樹)는 1937년에서 1945년까지의 전시체제하 '생산력확충계획', '물자동원계획'이 실시된 과정에서 석탄업이 가장 부심했던 광산노무문제를 지쿠호탄광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37년 9월, 상공성은 '석탄증산수급 5개년계획'을 책정하고, 조선인 노동자 대폭증가, 보호광부의 고용제한 완화, 취업시간제한 완화 규정을 정하였다. 일본에서 광부의 주된 공급원은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전시기 농촌은 징병과 징용으로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식량 수급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조선인 노동자와 근로보국대에 의존하였고, 전쟁 말기에는 공장전환자, 근로학도, 근로정신대, 중국인, 포로, 죄수까지 노동력으로 동원하였다. 1944년도 석탄생산은 자재의 절대적 부족과 유통기구의 혼란으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다나카는 무리한 증산 속에서 굶주림과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석탄업 노동자가 극도의 피폐상태에 있었던 것을 파탄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⁹⁾

9) 田中直樹, 「戰時炭鉱勞働事情論—筑豊炭山の事例を中心にして」, 『法學研究: 法律·政治·社會』 54(6),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部, 1981.

히로세 데이조(廣瀨貞三)는 「사도광산과 조선인노동자(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에서 전시동원 이전부터 패전 직후까지의 사도(佐渡)광산과 조선인의 관계 및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 실태, 패전 후 조선인 노동자가 귀국할 때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¹⁰⁾ 1910년대부터 사도광산에 취업하기 시작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나아제도(納屋制度) 하에서 나아 우두머리(部屋頭)의 엄격한 통제와 차별적 대우 속에서 주로 ‘운반부’, ‘습암부(襲岩夫)’, ‘지주부(支柱夫)’로서 갱내노동에 종사하였다. 일본의 전시체제가 진행됨에 따라, 미쓰비시 사도광업소는 금과 동의 증산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1939년 2월부터 1945년 7월까지, 모집·알선·징용의 형식으로 약 1,200명이 사도광산으로 보내졌고 그중 약 1,000명이 주로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에서 모집 형식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가혹한 노동을 견디지 못한 조선인 노동자는 1943년 6월까지 150명 이상이 도주하였다. 취로 중 징병된 조선인도 8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조선인 노동자의 도주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도광업소는 미쓰비시광업의 노자협조기관인 협화회, 반관민(半官民)의 광산통제회, 특고경찰이 중심이 된 니가타현 협화회 아이카와(相川)지회 등 삼중에 걸쳐 엄중하게 감시하였다. 패전 후,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는 타현으로부터의 귀환자를 포함해 약 570명에 달하였고, 1945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니가타항에서

10) 조선인 노동자 관련하여 히로세 데이조 외에 이치하라 히로시(市原博)의 연구도 주목된다. 이치하라는 스미토모(住友)광업의 조선인 노동자 관계자료를 분석하여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과 그들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는 1940년 간행된 반도광원모집 관계서류(『半島礦員募集關係書類』) 분석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 모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현지의 행정기구에 전면적으로 의존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현지 관리에 대한 다액의 공작자금이 필요하였던 것과, 특히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대우가 일본인 노동자와 다른 민족적 차별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市原博, 『戰時下の朝鮮人炭鉱労働の實態』, 『エネルギー史研究: 石炭を中心として』 15,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1991.

귀국했다.¹¹⁾

석탄업의 노무동원과 관련하여 강제노동과 민족차별이 총력전체제 하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조선으로부터의 노무동원의 실태와 배경 및 기업의 차별적 노무관리에 대한 와타리 아케시(亘明志)의 연구도 주목된다.¹²⁾ 와타리는 전시기 식민지 조선으로부터의 노무동원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는 ‘강제연행’에만 주목하여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대항언설도 ‘강제연행’의 유무만 초점화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노무동원의 배경과 실태, 그 구조 등을 생각하면 강제노동과 민족차별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연구「총력전과 전시기 식민지로부터의 노무동원을 둘러싸고(總力戰と戰時期における植民地からの勞務動員をめぐって)」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조선반도 출신자에게 국민징용령이 적용된 것은 1944년 9월이지만, 국민징용령 적용대상자에게는 가족의 부조나 원호와 같은 일본정부의 생활보조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그러한 생활보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¹³⁾

11) 廣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勞働者(1939~1945)」,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3),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 2000.

12) 亘明志, 「總力戰と戰時期における植民地からの勞務動員をめぐって」, 『現代社會研究科論集: 京都女子大學大學院現代社會研究科紀要』14, 2020.

13) 이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의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전후책임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논문을 포함하여 증언집과 연구서 목차 등 다수의 연구성과가 나왔다. 먼저 한국 쪽 연구성과를 간단히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 1995; 김인덕, 『강제연행사연구』, 경인문화사, 2002; 이상의, 『1930~40년대 日帝의 朝鮮人勞動力 動員體制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정혜경 책임편집, 『당꼬라고요?-강제동원구술기록집 I(관동지역)』,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5;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강제연행-강제노동-연구길라잡이』, 선인, 2005;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

(2) 일본정부의 석탄업 보호와 석탄 연구사

석탄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석탄통제회의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전시기 일본정부가 석탄을 어떻게 보호하고 통제하는지 도쿄 근교의 이바라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아이자와 가즈마사(相澤一正)의 연구도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1940년 3월 석탄배급통제법을 공포하고 5월에는 일원적인 판매통제회사로서 일본석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석탄통제를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생산자로부터의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이중가격제를 취하여 생산자로부터 높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판매하고 차액은 보상금제도를 적용하여 군수산업처럼 국고부담으로 우대하는 제도였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이 낮고 코스트가 높은 석탄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고 코스트가 낮은 석탄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이윤의 평준화를 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1940년 5월에는 ‘석탄증산장려금 교부규칙’과 ‘석탄갱개발조성금 교부규칙’을 발표하고, 이 외에도 ‘석탄적양촉진비’(石炭積揚促進費), ‘석탄품위단속비’(石炭品位取締費), ‘석탄행정정비충실비’(石炭行政整備充實費), ‘광산재해방지비’(鉱山災害防止費), ‘석탄광업현지계원양성비’(石炭礦業現地係員養成費)등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의 전시기 석탄통제의 특징은 석탄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게 국고보조를 통해 영업이익을 보장한 보호행정에 있었다.¹⁴⁾

성 정책』,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정혜경,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I: 일본편』, 선인, 2006; 정혜경,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연구II』, 선인, 2011 등이 있다. 또한, 일본 쪽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1965;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形成・構造・変容』, 綠陰書房, 2004; 山田昭次·古壓正·樋口雄一,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05; 西成田豊, 『勞働力動員と強制連行』, 山川出版社, 2009; 外村大, 『朝鮮人強制連行』, 岩波新書, 2012 등이 있다. 14) 相澤一正, 「戰時体制期における茨城地域の石炭産業」, 『エネルギー史研究』

석탄은 일본 내지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미쓰이, 미쓰비시, 메이지광업, 가이지마탄광은 중국에 진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그중 가이지마탄광의 눈에 띄는 경영실적 개선은 중일전쟁의 확대와 함께 전시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석탄 수요의 고조와 일치한다. 가이지마탄광은 1940년 중국 측과 북지나개발주식회사와의 공동출자로 일본군 점령하에 있던 중국 화북(河北省)에 이형탄광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일본정부는 석탄, 철, 면화, 소금 등의 자원 수탈을 위해 그 실무기관으로 1935년 12월 흥중공사(興中公司)를 설립하였다. 흥중공사의 운영에는 창립 당초부터 만주철도주식회사와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은 유명 광산기업이 참가하였고, 가이지마도 흥중공사의 협력회사로서 화북 점령지에 진출하였다. 1941년 말, 가이지마탄광의 중국대륙진출 실적은 이미 일본 국내의 석탄생산량을 능가하였고, 이러한 탄광경영을 바탕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두고 있었다. 하타케나카(畠中茂朗)는 가이지마탄광의 화북 지방 진출과 현지에 설립한 이형탄광의 실적이 일본정부와 재계, 군부가 밀접한 관련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인 결과였음을 지적하였다.¹⁵⁾

(3) 광산공해와 석탄 연구사

광산공해와 관련하여 근세 말과 메이지 초기의 연구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광산공해 연구도 주목할만 하다. 광독·광해 관련하여 요시다 후미카즈(吉田文和)는 미쓰이 금속광업 소유의 가미오카(神岡)광산을 사례로 15년 전쟁기(1931년~1945년), 특히 1937년부터

石炭を中心として』13,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1984.

15) 畠中茂朗, 「戦時下の華北占領地における大手石炭企業の進出と事業展開 : 貝島炭礦の事例を中心として」, 『エネルギー史研究 : 石炭を中心として』22,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2007; 「貝島炭礦における企業統治と事業活動の展開-昭和恐慌期から戦時体制期を中心として」, 『エネルギー史研究 : 石炭を中心として』20,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2005.

1945년까지의 광산공해를 검토하였다. 중일전쟁의 확대로 탄환, 축전지 등, 군수와 병기류의 소비가 증대하여 납과 아연의 수요가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1938년 7월, 납과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조합을 결성하였다(상공성령 제51호). 전시기 난채굴로 파헤쳐진 갱도는 무너지기 일쑤였고, 운반기나 광차는 이미 마모된 상태였기 때문에 광산업은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납과 아연은 잠수함이나 총탄 등의 살상 병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증산에 사용된 채광(採鉱)부문의 갱내배수, 선광(選鉱), 제련 부분으로부터의 폐기물은 증가하였지만, 일본정부는 전시기의 자재 부족으로 '폐기물배출방지설비의 절약'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주변 강으로 폐기물과 중금속이 흘러들어 가미오카광산 부근의 도야마(富山)평야의 농업피해는 극심해졌다. 이 시기 일본정부가 내세운 '생산력 확충'이란, 전시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 파괴'를 본질로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¹⁶⁾

광산 폐기물과 중금속으로 인해 전시 농업생산력의 피해에 직면했지만 일본정부는 군수부문을 우선시하고 농업피해는 후차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을 덮쳐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심화되었다.¹⁷⁾

16) 吉田文和, 「戦時下の鉱山公害問題-神岡鉱山の公害をめぐる技術と 経済(3)」, 『経済論叢』 119(3), 京都大學經濟學會, 1977.

17) '이타이이타이병'은 1910년부터 도야마평야 부근 진즈강에서 발생하였으며, 카드뮴중독증으로 손, 발, 관절 등이 아프고 뼈가 잘 부러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이타이이타이'라는 병명은 아프다는 뜻으로 증세를 호소할 때 사용한 표현에서 붙여진 병명이다. 아연의 제련 과정에서 배출된 폐광석을 통해 카드뮴이 유출되어, 진즈강에 흘러들어 온 이 물을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발병하였다. 이 병으로 인한 사망자만 56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2차대전 때, 철강생산이 늘어나며 이 병은 다시 확산되었지만 1957년 중금속 중독, 1961년 카드뮴중독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타이이타이병과 관련한 연구로는 *イタイイタイ病訴訟弁護団編*, 『イタイイタイ病裁判記録』, 労働旬報社, 1969; 『イタイイタイ病裁判』, 総合図書, 1971; 倉知三夫編, 『三井資本とイタイイタイ病』, 大月書店, 1979; *イタイイタイ病運動史研究會編*, 『語り継ぐイタイイタイ病住民運

미쓰이광산은 전시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전시중의 난굴과 외국인노동자의 강제노동, 공해의 심화 등은 국가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미쓰이 자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였다.¹⁸⁾ 하지만, 전후 점령기 재벌 해체에 서 볼 수 있듯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정부의 정책에는 미쓰이 자본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광독·광해가 환경에 미친 피해와 광산기업의 자본주의의 관련 연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예방에 중점을 둔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중 아오키 다쓰야(青木達也)는 아시오광산 퇴적장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고 퇴적장이 본래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시설이었지만, 아시오광산 광독사건¹⁹⁾ 발생 후 퇴적장을 법규상 광해 예방시설로서 명시하는 등 광해 예방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오광산 퇴적장은 일본정부의 광해 대책 역사를 보여주는 유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動：富山・神通川流域住民のたたかい』, 桂書房, 2011 등 이타이이타이병과 관련된 재판기록과 주민운동기록, 증언집, 구술집 등이 있다.(<https://namu.wiki/w/%EC%9D%B4%ED%83%80%EC%9D%B4%EC%9D%B4%ED%83%80%EC%9D%B4%EB%B3%91>)

- 18) 이와 관련하여 미쓰이금속광업은 반론으로서 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 발췌본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三井金屬鉱業編, 『「イタイイタイ病」に関する当社主張：裁判所提出の準備書面抜粋』, 三井金屬鉱業, 1972.
- 19) 후루카와광업의 아시오구리광산 광독사건은 일본 최초의 공업재해사건으로 19세기말 도치기현에서 발생하였다. 1891년 다나카 쇼조가 중의원 의회에서 아시오광산의 광독에 관한 질문장을 제출하고 이후, 광독 예방은 국가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아시오광산 광독사건으로 인해 광해 예방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기존의 광업조례의 관련법규 제정으로 1905년 광업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이 광업법이 제정 시행된다. 관련하여 광업경찰규칙, 광업법시행세칙 등이 제정되었다. 광독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예방을 위한 설비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퇴적장’은 법규상 예방시설로서 언급되게 되었다. 青木達也, 『鉱山に関する法規の変遷と足尾銅山の堆積場の歴史的的位置づけ』, 『土木史研究』 35, 2015.
- 20) 青木達也, 『鉱山に関する法規の変遷と足尾銅山の堆積場の歴史的的位置づ

3. 전후복구와 경제부흥 중심의 점령기와 고도성장기 석탄 연구사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맞이하였다. 패전과 함께 일본 광산기업은 해외광산을 비롯한 해외자산과 자본을 일거에 잃어버렸다. 이 무렵 일본 전국의 광산(탄광)에 설치된 시설과 설비는 공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갱내는 전시중의 난채굴로 황폐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공습과 패전으로 인한 노동자의 이산과 자재 부족은 석탄의 생산능력을 반감시켰다. 일본정부는 미증유의 위기에서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을 급선무로 하였다. 하지만, 경제부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 부족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난제였다. 석탄 부족은 생산과 생활을 위협하고 일본경제의 부흥과 재건을 좌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국민 일체의 석탄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석탄과 철강의 집중생산, 즉 경사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임시석탄광업관리법, 배탄공단법(配炭公団法)을 공포하여 석탄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정부는 석탄산업을 통한 경제부흥을 위해 1946년 ‘금광산탐광비보조금’제도를 부활시키고 1947년에는 동, 납, 아연, 알루미늄에 일시적이지만, ‘가격차보급금’을 지급하며 광업법 등 여러 제도를 정비하여 광산업은 점차 호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경제가 안정되면서 석탄통제를 전면 철폐하여 1950년 석탄기업은 자유경쟁시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점령기 석탄 연구 중, 일본정부가 통제경제 속에서 에너지의 생산-가격결정-유통-분배-소비라는 상호에 연관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석탄업이 경제부흥과 결합하는 경로를 추적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윤소량(尹燒亮)은 「점령하 일본에너지 정책과 경제부흥의 결합 경로(占領下の日本エネルギー政策と經濟復興の結合経路)」에서 전쟁으로 파멸적 상태에 있던 일본정부가 ‘경사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석탄업의 강력한 부흥을

け, 『土木史研究』 35, 2015.

피하고 동시에 수력발전 등 전기개발에 박차를 가하지만, 점령군의 정책 전환으로 석유정제업을 부활시켜 1960년대 이후의 에너지 혁명을 준비하는 체제가 정비된 것을 밝혔다.²¹⁾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석탄 수요산업이 대폭 감소하고 1960년도 이후 석유가격이 인하되면서 석유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을 대체하게 되었다. 동시에 석탄기업은 국내의 물가 인상과 석탄채굴의 코스트 상승,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의 파업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1962년 4월 「석탄광업조사단」을 편성하고, 본 조사단은 1962년 10월 “석탄이 중유(重油)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결정적이다”는 답신대강(答申大綱)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석탄광업의 붕괴가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 국민경제가 입는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국민적인 과제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이 중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석탄광업의 붕괴가 초래할 사회적 마찰의 회피에 주목한 폭넓은 정책”을 내걸었다. 이 정책 전환으로 2002년 3월 말까지, 홋카이도 일부 노천탄광을 제외하고 모든 탄광이 폐산되었다.²²⁾

고도경제성장기 석탄 연구는 에너지혁명기, 즉 석유가 석탄을 급속히 대체하던 시기의 석탄업의 사양화 과정을 주로 탄광기업의 경영측면을 통해 고찰한 연구가 주목된다. 전후 일본의 탄광기업이 최종적으로 모두 퇴출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은 수급구조의 변화였다. 정진성은 탄광기업의 폐광(폐산)이 산탄지역의 쇠퇴를 촉진하였고, 이것은 중장년 남자 노동자의 실업자 발생과 연계되어 일본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종종 탄광의

21) 尹燒亮, 「占領下の日本エネルギー政策と經濟復興の結合経路」, 『産業經營』 41, 早稻田大學産業經營研究所, 2007.

22)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https://www.enecho.meti.go.jp/about/whitepaper/2018html/1-1-2.html>), 검색일: 2021년 3월 26일.

구원책으로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탄광기업의 퇴출장벽으로 기능한 것을 지적하였다. 1955년 발표된 '석탄광업합리화 임시조치법'에 따라 퇴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탄광기업은 퇴출비용을 경감하거나 다른 부문으로의 전가 쪽에 전략의 초점을 두어, 결국 일본정부가 퇴출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형태로 탄광기업은 퇴출되었다.²³⁾ 석탄업은 진입부터 퇴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일본정부의 보호와 통제 안에서 진행되었다.

4.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광산(탄광) 연구사

전술한 바와 같이,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홋카이도의 일부 탄광을 제외한 일본의 모든 탄광은 현재 퇴출된 상태이다. 광산 연구도 2000년대에 들어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한 탄광(광산)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한일관계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나가사키의 하시마(일명, 군함도)탄광이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 아마구치 관련 지역'을 2014년 1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고, 이듬해, 7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시마탄광은 메이지유신기 근대산업시설로 등재되었다. 일본정부는 심의에서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달리, 하시마탄광 현장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23) 정진성, 「에너지혁명하 일본탄광기업의 경영전략」, 『국제지역연구』 13(3), 2004.

24) 《한겨레신문》, 2015년 7월 5일,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98997.html#cb>), 검색일: 2021년 4월 15일.

에 관한 기록이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²⁵⁾ 이윽고, 2020년 6월 15일 나가사키에서 한참 떨어진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지만, 그 내용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근대 산업화를 미화하는 전시물이었다.²⁶⁾ 유네스코에 등재된 하시마탄광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일관계에서는 갈등과 상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광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산과 유적의 가치 평가와 보존을 위해 단순한 사실관계의 서술이나 재현이 아닌 전체 역사 이해를 도모하는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연구²⁷⁾와 일본의 기억에 대한 역사인식,²⁸⁾ 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²⁹⁾가 2010년대 중반에 집중 논의되고 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규슈, 아마구치 관련 지역은 조선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핵심 지역이다. 당시 5만 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가 미쓰비시, 미쓰이, 신일본제철 등의 전범기업이 운영하는 조선소와 탄광, 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에 시달렸던 곳이다. 일본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을 매개로 근대화 ‘산업유산’의 이미지를 하시마탄광에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은폐되어 있다. 하시마탄광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는 기억해야 할 역사이며, 공유되어야 할 역사이다.

한편 관광자원으로서 재탄생한 아키타현(秋田縣) 북부의 고사카쵸(小

25) 필자는 2019년 7월 1일 하시마탄광을 답사했다.

26) 《연합뉴스》, 2020년 6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082800073>), 검색일: 2021년 4월 15일.

27) 한정선, 「군함도, 산업유산과 지옥관광 사이에서」, 『역사비평』 121, 284쪽.

28) 서민교,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일본의 침략전쟁의 기억과 UNESCO 문화유산과 기억유산 등재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60, 2015.

29) 김동진·남지현, 「일본 규슈-아마구치 일원 근대화 산업유산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토계획』 49(2), 2014.

坂町)의 연구도 볼 수 있다. 스즈키(鈴木絢子)는 한때 인구 2만 명을 자랑하는 아키타현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였던 고사카초가 현재는 모두 폐광상태로 인구도 5,80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30년 전부터 산업유산을 활용하여 광산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마을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과정을 고찰하였다.³⁰⁾ 고사카초는 광산업의 기술을 되살려서 금속 리사이클산업에 전념하여 쓰레기를 비료화하고 유희농지를 이용하여 유채꽃을 재배하며 ‘자원순환마을’로도 주목받고 있다. 고사카초는 메이지기의 극장 ‘강락관(康樂館)’의 개수공사를 진행하고, 강락관의 소유자인 동화광업(현재의 DOWA홀딩스)으로부터 강락관을 무상으로 인계받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마을만들기에 활용하였다. 강락관과 고사카광산사무소의 산업유산 관리는 ‘고사카마을만들기(주)’가 담당하고 있다. 고사카초는 산업유산의 지정관리, 운영, 인재파견, 물품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여 2013년에는 여행업의 인가도 취득하였다. 고사카초의 문화유산과 마을만들기는 폐광상태의 다른 현에게도 참고가 되고 있다.³¹⁾

30) 鈴木絢子, 「地域資源を活用した振興策—秋田縣小坂町を事例に」, 『レファレンス』, 國立國會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14년 4월.

31) 광산자원의 문화유산화에 관한 연구로는 히라이 다케후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히라이는 문화유산을 프로세스로서 파악하여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의 산업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일련의 프로세스로서 분석하였다. 平井健文, 「日本における産業遺産の観光資源化プロセス-炭鉱・鉱山の遺構に見出される価値の変容に着目して」, 『観光學評論』 5(1), 2017.

Ⅲ. 나오며-연구 과제

1. 석탄 연구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

일본에서 광산 노무자로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 후반으로 1924년에는 이미 약 7만 명에 달하였다. 1933년 9월 1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광부노역부조규칙’ 제7조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갱내노동과 심야업에 대한 금지규정’의 시행으로 광산의 여성노동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격화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정부는 1939년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금지를 완화하는 ‘광부노역부조규칙 개정특례’를 발령하고 이로써 광산의 여성노동자는 다시 증가하였다.³²⁾

앞에서 서술한 석탄 관련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존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니시나리타 유타카가 지쿠호탄광의 일본인 여성노동자 해고 과정을 고찰하였지만, 그것은 광산합리화와 기계혁신에 초점을 둔 연구였다. 광산업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특징상, 광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수많은 임노동자가 광산을 중심으로 광산도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갱내외에서 행해지는 중노동에 가까운 노동강도로 미혼보다는 기혼이 많았고 그들은 주로 광산 주변의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광산업의 특징은 부부가 함께 광산에서 일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광산부설탁아소는 메이지 초기부터 설치되어 전시기에는 석탄증산정책과 더불어 급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옥은 아키타현(秋田縣) 하나오

32) 김경옥, 「전시기 일본 여성의 광산노동과 보육-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20,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9, 308-309쪽.

카(花岡)광산을 중심으로 전시기 일본 여성의 광산노동과 보육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시기 하나오카광산의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검토하고 탁아소가 여성노동력 동원을 위한 장치이자 노무관리와 교화 및 잠재적 노동력 유입장치로서 기능한 것을 지적하였다.³³⁾

1939년 일본정부는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과 심야업 완화 조건으로 여성노동자에게 25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광산의 중노동을 견디기 위해서 강인한 체력을 가진 기혼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광산도시에서 25세 이상의 여성은 '자녀가 둘'인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일본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감소하는 인구의 위기 속에서 모성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을 만큼 체력적으로 강인한 여성노동자를 원했던 것이다. 1933년 이후로 광산에서 감소했던 여성노동자는 1939년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과 심야업 완화 정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일본정부가 노동정책에서도 관심을 가진 여성노동자는 석탄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의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떤 일에 종사하였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전술한 지쿠호탄광이나 하나오카탄광은 일본 근세부터 현재까지의 석탄 연구사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홋카이도, 규슈 등의 탄광에서 약 70~80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중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그들의 흔적과 기억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제의하는 바이다.

33) 김경옥, 「전시기 일본 여성의 광산노동과 보육-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20,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9. 이 외에도 노요리 사오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요리는 1904년부터 1939년을 배경으로 지쿠호탄광의 갱내보육소를 살핌으로써 자본의 논리와 노동자의 교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野依智子, 「近代筑豊炭鉱における坑内保育所の展開過程」, 『エネルギー史研究: 石炭を中心として20』, 九州大學, 2005.

2. 폐광(폐산)과 기억

일본에서 석탄산업은 거의 퇴출되어 현재는 폐광의 흔적으로 예전에 광산이 있었다는 것을 겨우 기억하곤 한다. 그러나 폐광 이후 30~40년이 지난 지금 골프장이 되거나 새로이 공장이 들어서 광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곳도 많다.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 노동자들은 석탄 증산을 위해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전후 귀향한 사람도 있지만, 귀향하지 못하고 작업 중에 혹은 공습으로 혹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 일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다.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는 길일 것이다. 여기서는 기억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2015년 9월, 홋카이도에서 출발한 조선인 강제노동희생자 유골 115구의 '70년 만의 귀향'을 통한 기억이다. 이 행사는 일본과 한국, 재일조선인 그리고 미국과 호주의 시민이 결성한 '강제노동희생자추도·유골봉환 위원회'라는 단체가 주최하였다. 행사의 일정은 과거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반도를 떠나 홋카이도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거꾸로 하고 있다. 과거 조선인 노동자들의 도착지였던 홋카이도를 출발지로 하여 내륙을 관통해 시모노세키를 통해 바다를 건너 부산에 도착해 다시 서울로 올라가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으로 파주 서울시립공원묘지에 모시는 여정이었다. 전후 '70년 만의 귀향'은 국경과 민족을 넘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추도와 봉환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나누며 행해졌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기억을 공유하며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였다.³⁴⁾

34)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의 검색주소를 적기한다. 류석진, '기억전쟁, 미래가 된 과거'(14)조선인 유골 115구의 귀향... '식민 과 전쟁' 증언 넘어 평화를 말하다, 경향신문, 2020.7.7.(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72028005#csidx6c8ce57807e703e9564d5d4491ac147)

둘째는 후쿠오카 지쿠호탄광에 있는 무덤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묘표(無緣墓標)를 모신 '쇼간보리공양탑' 건립과 추모의식을 통한 기억이다. 이 무연고 묘표의 주인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인 노동자라 한다. 원래 쇼간보리공양탑이 있던 자리는 '덕향추모비'가 있던 자리로, 그 토지가 1992년 골프회사에 매각되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증장비로 묘지를 파헤쳤다. 추모비를 지키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위령비를 다시 건립해 보존하겠다고 이웃주민에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웃주민들은 자신들의 회사 순직자의 묘지를 판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위령비 건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령비 건립을 위한 7개의 단체가 1994년 '고타케마치 합맹공양탑 관리조합'을 결성하고 납골식 공양탑 건립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민단과 총련, 일본인이 협력하여 쇼간보리공양탑을 완성하였다.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인 쇼간보리공양탑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연고 묘표를 함께 공양하는 과정을 공유하며 그들은 무연(無緣)을 넘어 유연(有緣)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만든 것이다.³⁵⁾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민간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기억의 공유가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모리스 알박스가 제시한 '집단적 기억'은 과거를 현재의 어떤 장소나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체성 확립을 촉진시킨다. 위령비와 공양탑, 유골봉환 등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현재적 경험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장소나 공간에서 새롭게 파악되어진다. 이러한 장소나 공간에서의 공동체적 경험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억으로서

35) 가와마쓰 아카리, 「탄광 희생자의 공양과 일·한·조의 '우호'-일본의 옛 채굴지 지쿠호의 주민 실천을 사례로」, 『문화권력과 버내쿨러』, 소화, 2020.

재구성할 수 있다. 일본 하시마탄광에서 볼 수 있는 광산의 유산은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피해자의 기억을 은폐한 채로, 근대화된 산업유산이라는 자기 미화를 강조한 가해자의 기억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광산(탄광)과 같은 유산에서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1.03.31. 투고 / 2021.04.13. 심사완료 / 2021.04.19. 게재확정)

[Abstract]

Current Status and Tasks of Japan's Coal Research History

Kim, Kyung-ok

Modern Japan's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based on its coal industry, and its importance in modern Japanese history cannot be overemphasized. Likewise, coal research history concerns itself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industry, especially that of the nation's intervention in the industry, including management and control, and its ties with business, labor, welfare, and a wide range of research areas such as local history. All these aspects can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histor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coal research history in Japan. To clearly examine the nation's involvement in the natural resource, we will classify each event according to a time series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history, with a focus on the times and the nation's intervention. The events in the time series first look at the research status of mining history in the late modern and early Meiji periods, then research on coal during the Asian-Pacific War, followed by that of the period of occupation and high economic growth, and last, mines as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resources. The data is then divided into private research and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earch, by whic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ation's intervention and all processes of the coal industry, including its entry, development, and exit, can be

examined. Finally, the paper suggests further research in the methods of remembering and documenting the lives of the female workers and the Korean workers who are fairly invisible in existing research in coal research history and whose traces cannot be found easily.

□ Keyword

Coal History, Modern Japanese History, Asia-Pacific War, Nation's Intervention, the Period of Occupation

[참고문헌]

-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https://www.enecho.meti.go.jp/about/whitepaper/2018html/1-1-2.html>)
- 小葉田淳, 『鉱山の歴史』, 至文堂, 1956.
- 小葉田淳, 『日本鉱山史の研究』, 岩波書店, 1968.
- 川崎茂, 「鉱山業近代化の空間的構造展開」, 『地理學評論』 31(12), 1958.
- 秦小紅, 「日本の近代工業化の發展過程-殖産興業政策·財政·勞働力の視點から」, 『商學研究論集』 38, 明治大學商學部, 2013.
- 淺田毅衛, 「明治期殖産興業政策の終局と日本資本主義の確立」, 『明大商學論叢』 79(1-2), 明大大學商學部, 1997.
- 吉田文和, 「戰時下の鉱山公害問題-神岡鉱山の公害をめぐる技術と經濟(3)」, 『經濟論叢』 119(3), 京都大學經濟學會, 1977.
- 三井金屬鉱業編, 『「イタイイタイ病」に関する当社主張: 裁判所提出の準備書面抜粋』, 三井金屬鉱業, 1972.
- 青木達也, 「鉱山に関する法規の変遷と足尾銅山の堆積場の歴史的位臆づけ」, 『土木史研究』 35, 2015.
- 田中直樹, 「戰時炭鉱勞働事情論-筑豊炭山の事例を中心にして」, 『法學研究:法律·政治·社會』 54(6),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部, 1981.
- 相澤一正, 「戰時体制期における茨城地域の石炭産業」, 『エネルギー史研究:石炭を中心として』 13,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1984.
- 市原博, 「戰時下の朝鮮人炭鉱勞働の實態」, 『エネルギー史研究:石炭を中心として』 15,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1991.
- 廣瀨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勞働者(1939~1945)」,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 (3),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 2000.
- 畠中茂朗, 「貝島炭礦における企業統治と事業活動の展開-昭和恐慌期

- から戦時体制期を中心として」, 『エネルギー史研究: 石炭を中心として』20,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2005.
- 畠中茂朗, 「戦時下の華北占領地における大手石炭企業の進出と事業展開: 貝島炭礦の事例を中心として」, 『エネルギー史研究: 石炭を中心として』22, 九州大學石炭研究資料センター, 2007.
- 亘明志, 「總力戦と戦時期における植民地からの勞務動員をめぐって」, 『現代社會研究科論集: 京都女子大學大學院現代社會研究科紀要』14, 2020.
-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1965.
-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形成・構造・変容』, 綠陰書房, 2004.
- 外村大, 『朝鮮人強制連行』, 岩波新書, 2012.
- 山田昭次・古壓正・樋口雄一, 『朝鮮人戦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05.
- 西成田豊, 『勞働力動員と強制連行』, 山川出版社, 2009.
- 尹燒亮, 「占領下の日本エネルギー政策と經濟復興の結合経路」, 『産業經營』41, 早稻田大學産業經營研究所, 2007.
- 鈴木絢子, 「地域資源を活用した振興策-秋田縣小坂町を事例に」, 『レファレンス』, 國立國會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14.
- 平井健文, 「日本における産業遺産の觀光資源化プロセス-炭鉱・鉾山の遺構に見出される価値の変容に着目して」, 『觀光學評論』5(1), 2017.
- 西成田豊, 『近代日本勞働史-勞働力編成の論理と實証』, 有斐閣, 2007.
- 가와마쓰 아카리, 「탄광 희생자의 공양과 일·한 조의 '우호'-일본의 옛 채굴지 지쿠호의 주민 실천을 사례로」, 『문화권력과 버내쿨러』, 소화, 2020.
- 김경옥, 「전시기 일본 여성의 광산노동과 보육-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을 중심으로」, 『일본비평』20,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9.

정진성, 「에너지혁명하 일본탄광기업의 경영전략」, 『국제지역연구』 13(3), 2004.

정진성, 「에너지혁명기 일본 석탄산업의 노동운동-석탄정책 전환투쟁을 중심으로」, 『韓日經常論集』 제56권, 2012.